

신국제질서하의 중국·ASEAN 관계발전 전망

이요한*

- I. 서론
- II. 중국의 대(對) ASEAN 외교강화 배경
- III. 중국·ASEAN의 주요 현안과 전망
- IV. 결론

I. 서론

냉전기의 중국·ASEAN 관계는 전략적 제휴와 대립이 반복되었다. 1967년 ASEAN의 출범은 동남아의 역화구도상 반공(反共)적인 성향을 띠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중반 베트남을 비롯하여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되고 이 지역에 소련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중국과 ASEAN은 소련·베트남 연합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연대(連帶)를 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자 중국과 ASEAN의 관계는 남중국해 분쟁과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으로 접근 속도가 다소 완화되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국제질서는 이전 세기와 다른 정치적·경제적

* 호서대 경상학부 겸임교수

변화들이 일어났고 이는 동아시아 국가관계 특히 중국과 ASEAN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ASEAN+3(한·중·일) 정상회의가 정례화 되었으며, 2001년에는 ASEAN과 중국이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에 합의하는 등 양 지역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국제문제에서 경제가 정치, 안보, 군사보다 중시되면서 양측의 관계는 긴밀화되었고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은 ASEAN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중국·ASEAN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본·ASEAN 관계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ASEAN내의 화인(華人)의 경제적 네트워크 형성 등의 비공식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국가 간의 공식적 외교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중국과 ASEAN 국가 관계를 다룬 소수의 의미 있는 연구(정수산 1995; 신상진 1996; 변창구 1999)들이 최근에 있었으나, 대부분 남중국해 문제 등 상호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치경제의 변수들이 중국·ASEAN 관계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향후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와 국가 간 공식적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시기적으로는 중국과 아세안 관계에 전환점이 된 1997년의 동남아 위기 이후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또한 중국·ASEAN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변수들을 중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이 최근 ASEAN 정책을 강화하게 된 요소들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동남아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미·일 연합의 외교적 대응 측면과 중국의 ASEAN에 대한 경제적 역할 증대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즉 중국의 대(對) ASEAN외교 강화에 대한 배경을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21세기 중국·ASEAN 관계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전망하고자 한다. 3장 역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국가와 국가 간 노력과 국가의 역할이 완화된 민간 부문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 합의된 FTA의 의미와 화인네트워크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중국·ASEAN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며 중국·ASEAN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조명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중국의 대(對) ASEAN 외교강화 배경

1. 미·일 동맹의 견제

탈냉전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의 과정(process of peace)이었기 보다는 분쟁의 시작(beginning of conflict)이었다고 할 수 있다(Godwin 1994, 34). 동남아 지역의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감소는 지역 헤게모니의 다극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영토 분쟁에 대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탈냉전은 주요 강대국들의 관계 개선을 가져왔는데 전통적 적대 세력이었던 중국·러시아, 중국·인도, 미국·러시아와의 화해가 이루어졌다(Harding 1990, 34). 동남아시아 국가들간의 관계개선도 주목할 만했다. 자유주의 진영의 ASEAN 국가와 공산주의권의 인도차이나 3국이 과거의 이념대립을 종식하였다. 베트남을 견제하기 위해 창설된 ASEAN에 '베트남'이 가입하면서 동남아국가들의 협력과 화해는 가속화되었다. 베트남의 ASEAN 가입은 동남아 국제질서가 기존의 중국-베트남-ASEAN의 '3각 구도'가 중국-ASEAN의 '양각 구도'로 새롭게 개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 중국과 ASEAN관계가 공식적으로 강화되었지만(신상진 1996, 1)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잠재적 분쟁요인을 갖고 있었다. 남중국해 분쟁의 시작과 이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중국의 쌍무주의와 ASEAN의 다자주의 외교적 대립, 그리고 베트남의 ASEAN가입으로 인한 새로운 대결 구도 등은 양 지역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로 ASEAN 외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辛 旗 1998, 65-67)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질서가 다극화(多極化) 되어감으로써 특정한 패권에 의한 것이 아닌 미·중·일·ASEAN 등 다원적인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중국은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우려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ASEAN 역시 외환 위기 이후 방위비가 크게 삭감되었고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지양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의 대(對) ASEAN 정책의 변화는 자국에게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대외적으로는 지역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데올로기보다 국가의 실리를 중시하는 대외정책 노선을 더욱 확실히 추구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 중국에게 안보·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에 입각하여 대외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다(Quimao 1993, 241-245). 이에 따라 중국은 ASEAN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대내경제발전에 부합하는 대외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중국은 주변환경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대외정책의 최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Kim 1998, 378). 이와 같은 중국의 대(對) ASEAN 정책의 변화는 미국의 대(對) 중국 봉쇄전략(封鎖戰略)을 차단하고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ASEAN 국가관계가 우호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경제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도 공동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ASEAN은 각국이 지닌 독특한 역사, 문화, 사회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인권이나 민주화 일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인권문제를 이용한 타국의 내정간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Nyun 1994, 29-31). 중국의 주권 보호, 내정간섭 반대 등은 ASEAN이 평소 주장한 자유·평화 및 중립지대안(ZOPFAN: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은

리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본래 1950년대 중반 냉전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고착화되던 시점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미·소 분할체제를 반대하면서 제 3세계를 출범시킨 주역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과 ASEAN의 협력은 생소한 것이 아니며 서구 중심체제에 대항했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ASEAN의 외교적 이해관계는 미국의 현 부시행정부가 출범되면서 더욱 일치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힘의 논리로 MD(미사일 방어)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물론, 평소 동남아 비핵지대화(SEANWFZ: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s Free Zone)를 구상하고 있었던 ASEAN에게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탈냉전의 新국제질서는 전통적인 안보위협인 구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게다가, 전통적인 지역경쟁국 일본이 1996년 4월 <미·일 안보 공동선언(US-Japan Joint Declaration)>과 1997년 <미·일 방위협력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등 중국을 긴장시켰다. 따라서, 중국은 ASEAN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미국의 포위정책에 의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서는 안정된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해 인근국가와의 외교적 긴장과 마찰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ASEAN과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Moore, et al. 1999, 393)

2. 동남아 외환위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인접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역경제협력에 경계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이 일본을 비롯한 서방자본의 침투를 가져와 중국과 개발도상국을 착취하려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다. 경제개방과 개혁은 확대되었으나, 경제적 지역주의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인식은 계속되었고, 홍콩과 화인자본의 제한적 유입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에 의해 1991년 제창된 동아시아경제회의(EAEC : East Asia Economic Caucus)에 대해 중국은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화”를 표방하고 있는 점에서 적극 지지한 바 있다.

1996년 7월 중국은 ASEAN의 전면적 대화상대국이 되었고 1997년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 1997년 역내 대부분의 국가가 외환부족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원조건으로 대상국의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요구함으로써 서구자본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중국과 ASEAN의 기본적인 시각이 유사했다. 서구의 시각은 동남아 금융위기가 정경유착, 부정부패, 과잉투자 등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만, 중국과 ASEAN은 서구자본의 의도적인 환투기 즉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중국은 주권과 명예회복의 상징인 「홍콩반환」이 1997년 6월 30일에 이루어졌는데, 불과 이를 후인 태국의 바트화가 공격당한 점에 주목한다. 당시 태국의 저시경제지표는 매우 건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트화는 폭락하였고 동남아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다. 중국과 ASEAN은 동남아 외환위기의 최대피해자는 화인자본이며, 이들이 양 지역경제성장에 견인차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곧 서구의 공격대상은 중국과 ASEAN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중국과 ASEAN은 동남아의 경제위기가 국가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서구자본을 진입시키기 위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1) 서구음모론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중국과 ASEAN의 위기 원인에 대한 입장과 그 해결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 1) 국제적인 초단기 투기자본의 공격이 동남아 외환위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미국 최대의 투자신탁회사(Quantum Group of Fund)의 회장인 조지 소로스과 같은 탐욕스러운 투기꾼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얀마의 ASEAN 가입을 허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동남아국가들의 통화를 공격했다고 비난했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7, 10, 02).

중국은 동남아 위기의 해결을 위해 태국에 10억 달러를 지원했고, 인도네시아에도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박변순 2002, 1).

ASEAN과 중국은 국제통화기금의 가혹한 조건에 대해 반발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의 재연을 방지할 역내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 ASEAN 창설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동북아 3국(한·중·일)의 정상이 초대되었고 이는 향후 ASEAN+3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동아시아경제회의(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 구상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ASEAN+3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절박감에 기인한 바 크다. 동아시아 국가는 역내 개별국가의 위기가 결코 자국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경제위기의 조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동아시아경제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과 ASEAN은 수출구조의 중복과 해외투자유치의 경쟁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위기 이후 역내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위기의 절정이었던 199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외국인 투자증가율이 모두 둔화되었다. 중국의 주요수출시장인 동남아의 수입수요가 급감하였으며 무엇보다 동남아 화인의 자본과 일본의 해외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주변국의 우려 속에서도 위안화(元貨)를 평가절하하지 않음으로써 역내국가의 경제회복에 기여하였다. 중국은 외환위기 속에 아시아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을 과시한 반면,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지원구상을 발표하였으나, 계속된 국내경기침체와 엔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로 인해 역내국가의 회복을 오히려 지연하고 있다. 이는 과거 ASEAN에 대해 절대적 우위에 있던 일본의 경제적 헤게모니에 큰 오점을 남겼고 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헤게모니가 점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ASEAN+3이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과도한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APEC이 미국의 주도 하에 좌우되는 것을 견제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아울러 ASEAN+3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경제권 형성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중국과 ASEAN의 외교적 거리를 좁히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Zhenyuan 1994, 21-22). 중국은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존도 심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세계경제의 지역화 현상이 민족과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는 국제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 간 상호의존을 더욱 증대시키고 국가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지역 간 상호의존도의 심화는 국가 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고 지역국가 간 경쟁의 규칙을 보다 협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고, 세계경제의 주요국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단일국가경제로 세계경제에 편입해야 하는 과도가 가운데 있다. 더구나 중국경제가 국내에서는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국가경제적 차원에서의 응집력도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요구하는 일반적 규범에 취약한 국내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지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안정장치를 도모하면서 전 세계적인 지역경제의 흐름에 중국과의 지역적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천신만고 끝에 WTO에 가입했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된 미국과의 갈등은 단순히 국가적 관계의 의미보다는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의 실험장으로 나아가는 전초전인 셈이고 세계경제로의 진입과정에 중국이 겪고 있는 불안정성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중국이 EU나 NAFTA와 같이 지역적 완충지에 중국경제의 안정적 발판을 구축하지 못한 채 바로 세계경제의 제도적 통합에 노출된다면 중국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남광규 1998, 69-70). 그러므로 제도적인 세계경제의 경

쟁에 바로 노출되기 이전에 중국이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쉬운 접근이 ASEAN일 것이다. ASEAN+3의 제도화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ASEAN+1 회담²⁾을 통해 양 지역의 정상이 외교현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I. 중국·ASEAN의 주요 현안과 전망

1. 경제협력의 제도화

2001년 11월 4~6일 브루나이에서 있었던 ASEAN+3의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향후 10년에 걸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이 WTO 가입 이후(2001년 12월 11일 정식가입) 무역 및 투자자의 자유화가 확실적인 가운데 첫 자유무역지대로 ASEAN을 대상으로 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필요하다면 ASEAN의 저개발국, 즉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를 할 수 있으며 협상개시 전이라도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부문에서는 인하하는 “조기수확”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ASEAN의 자원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ASEAN 시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SEAN 또한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접근이 용이하고 ASEAN에 있는 화인들이 공동의 브랜드를 형성해 중국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ASEAN이 중국 공산품 수입의 홍수를 우려하면서도 중국과 자유무역시대에 합의한 것은 현재의 대미의존도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ASEAN은 일본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특히 전자산업을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써 2001년의 경우에 보듯이 미국경제의 변화에 따라 경제침

2) ASEAN은 ASEAN+3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동북아 3개국의 정상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ASEAN+1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체를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계속 주요 수출시장으로 존재하지만 중국과의 역내부역을 통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ASEAN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화인을 통한 중국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활용한다면 동반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중국에게 ASEAN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고하게 자리잡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의 역할이 축소된 틈을 타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1995이후 지속되고 있는 엔화약세는 동남아에 대한 일본 금융기관의 대출 및 기업들의 투자를 정체시키면서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ASEAN의 대일 의존도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반면 중국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³⁾

일본의 침체와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의 분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대동남아 직접투자 및 역수입 관계가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 그 협력의 축이 일본-중국과 중국-ASEAN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ASEAN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철수가 확산되고 있다(오승구 2002, 13-14). 일본 기업의 경우 중국과 ASEAN의 FTA가 결성되면, 기존의 ASEAN 투자를 통해 중국의 우회 수출이 가능하게 되고 중국에 대한 신규투자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1997년 이후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해외진출의 첫 대상지가 ASEAN인 것이다. 중국기업의 대 ASEAN 투자가 2001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승인된 중국기업의 투자는 말레이시아에서 7.8억 달러, 태국에서 2.1억 달러였다. 인도네시아에서도 1999년 570억 루피아에서 2000년 1,520

3) 일본의 대 ASEAN 직접투자 추이는 1997년 9,613억 엔에서 2000년 2,751억 엔으로 감소하였으며, ASEAN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1990년 18.3퍼센트에서 2000년 13.5퍼센트로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ASEAN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1990년 1.8퍼센트에서 2001년 4.2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의 루피아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ASEAN의 기술수준이 낮고 ASEAN 전체가 AFTA로 통합되어가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2. 화인네트워크의 강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광의의 중화경제협력으로 볼 때 중화경제는 제도적 형태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보다는 국가 간 협정이 따로 필요치 않는 특징을 가진 기능적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확대인 화남경제권과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현재의 중국현실에 오히려 잘 연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화인자본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화인자본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점도 오히려 자본을 비롯한 중국내 투자 유치에 있어서 중국정부의 융통성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외연적 확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한계론과 국가경제의 형성 및 세계의 압력이라는 이중적 구조조정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경제로의 이전과 세계경제로의 편입에 중화경제는 완충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⁴⁾

중화경제권의 수요 창출은 중국과 ASEAN 지역의 장기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다. 아시아 전역의 외환위기 속에서도 중국, 대만 등 중화경제권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는데 이는 화인의 역할이 매우 컸다. 화인은 이미 중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최대의 대중(對中) 투자자이다. 투자자원의 제공, 기술과 기업경영 기법의 전수, 고용 창출 등 경제발전에 직접적 공헌함과 아울러 중국과 아시아 경제와의

4) 1997년 현재, 중화경제권의 인구는 전 세계의 21.7퍼센트, GDP는 전 세계의 4.3 퍼센트, 교역량은 전 세계의 8.8퍼센트 규모에 이르고 있다. World Bank는 공정 환율로 계산한 현 중국의 GDP는 과소평가 되어 있으며, 구매력 평가로 계산한 중화경제권의 GDP는 2002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World Bank의 전망은 '중국위협론'에 바탕을 두고 다소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는 공식환율과 구매력평가로 계산한 중간수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World Bank(1998), *Annual Report* 참조.

교량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화인자본·상권은 중화경제권을 실질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과 ASEAN 각국과의 경제관계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전 세계 화인인구의 87퍼센트가 동남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 외환위기가 서방 투기자본의 음모설이라는 견해도 일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막강한 화인자본의 효율적 동원 노력이 필요했다(Harding 1993, 684).

화인 자본은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가교(假橋)가 되고 있다. 중국사회 전체의 유연성과 대외개방의 확대에 따라 상호의존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적어도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정향이 갈수록 퇴조하면서 투자환경이 안정되어 외국자본의 중국진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켜 왔다. 또한 정치적으로 '1국 2체제'라는 통일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대륙과 대만관계 즉 양안(兩岸)관계와 홍콩문제에 대해 신축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 홍콩과 마카오의 순조로운 귀속 과정을 통해 중국인 사회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다(이희옥 1996, 376).

뿐만 아니라 중국은 최근 중국위협론의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고 동남아국가와 과거 혁명수출이라는 불편했던 관계를 불식시키기에 주력하였다. 나아가서 중요성을 더해 가는 ASEAN 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1990년 이후 동남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주력한 결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수교(또는 복교)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대중화경제권 구성국가 간의 관계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전통적으로 화인과 본토와의 비공식 관계를 중시해 왔다. 이러한 문화적 연대에 기초한 비공식적인 관계는 법적, 제도적 관계보다 우선되었으며, 이제까지 이데올로기의 장벽과 중국 정부의 관료제의 장벽도 극복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의 개혁개방정책을 강화하고 해외자본 유치와 경제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주의와 현대자본주의를 재평가하면서 이데올로기 유연화와 정책 대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중화경

제권 구성국가의 경제적 비교우위에 기초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의 노하우를 이전 받고 대만과 홍콩 및 동남아 중국계 기업과 제 3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중국의 경제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발전전략의 소산이다.

중국경제는 이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하여 홍콩과 대만 경제와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 왔고,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광동성을 포함한 남부지역의 경제발전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중국이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취약한 현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화인자본의 네트워크 강화로 성공적인 개혁·개방정책과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 세계무역질서에 편입되어 가고 있는 중국 경제는, 급속한 개혁과 개방보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체제 전환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로 서방국가와 잦은 마찰을 보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기존의 화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또한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ASEAN 국가와의 협력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화인네트워크는 지금까지 중국과 ASEAN관계의 비공식적 교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는 국가 간 관계발전과 협력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인 대립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수천 년에 걸쳐 동남아 지역국가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20세기의 중국은 ASEAN에게 위협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공산세력에 대한 지원, 남중국해 분쟁에서 보여준 전방위적인 영유권의 주장 등 중국은 분명히 ASEAN에게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주어왔음이 분명하다. 21세기의 중국이 ASEAN의 이러한 부담을 일시에 해소할 만큼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중국과 ASEAN의 관계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ASEAN의 외교적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ASEAN 입장에서 '평화적인 중국'과의 관계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절실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에 중국·ASEAN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변수는 양 지역(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별히 지금까지 중국·ASEAN 관계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경제적 상호의존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ASEAN 관계는 남중국해 문제 중심의 안보적 이슈에서 FTA 중심의 경제적 이슈로 전환되고 있으며, 경제적 변수의 역할이 증대될수록 중국과 ASEAN의 협력적 관계는 필수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ASEAN 관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지금까지 중국과 ASEAN관계의 해묵은 과제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록 경제적인 변수의 역할이 증가했지만, 남중국해로 인한 분쟁이 재연될 경우 중국·ASEAN 관계는 쉽게 냉각될 수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중국과 ASEAN의 최대공약수 즉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ARF 및 ASEAN+3 (ASEAN+1)의 공식적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ASEAN국가의 일치된 입장이 필요하다. 2003년까지 ASEAN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지대는 ASEAN에게 버거운 과제이다. 특히 중국과의 자유무역지대 결성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공업국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베트남과 같이 중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른 개별국가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에 이를 것인가가 주목된다. 자유무역지대의 결성까지는 10년의 유예기간이 확보되어있으므로,

ASEAN국가는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역내국가간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ASEAN 국가의 이견이 크면 클수록 자유무역지대의 결성자체가 불투명해 질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전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셋째, 중국과 ASEAN의 협력관계가 의미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아시아 경제의 1위(일본)와 3위(한국)가 배제된 자유무역지대는 그 창출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중국과 ASEAN 역시 양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이기보다는 당장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써 또 보완기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ASEAN의 협력강화는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과 과제를 던져준다. 중국과 ASEAN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적 비중도 매우 크다. 일본은 싱가포르와 FTA를 합의했고, 중국은 ASEAN과 FTA를 합의한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지대가 전혀 없는 WTO의 유일한 국가로 전락할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대외무역은 우리에게 여전히 성장의 핵심이며, 따라서 중국, ASEAN 등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지역 협력에 관한 각국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므로 한국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과 ASEAN이 비록 경쟁적인 입장에서도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하여 우리도 향후 외교전략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국진 외. 1993. 『아세안의 정치경제』. 서울: 집문당.
- 남광규. 1998. “중화경제: 지역화(Regionalization)를 통한 중국경제의 확대-화남경제권과 동남아 화교자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3).
- 박번순. 2002. “동남아를 둘러싼 중·일 경쟁과 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배궁찬 외. 1995. “아세안의 정치경제.” 『동남아의 정치경제』. 서울: 21세기 한국연구재단.
- 변창구. 1999. “중국의 남진정책과 아세안의 대응.” 『동남아시아연구』 7.
- 양승윤. 1996. 『동남아와 아세안』.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희옥. 1996. “중국제 자본의 동아시아 지배전략: 대중화경제권 형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 辛 旗. 1998. “중국권-이론과 현실적 모형.” 『大公報』, 22(29).
- Qimao, Chen. 1993.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The Post-Cold War.” *Asian Survey*, 33(3) March.
- Sambaugh, David. 1994. “Growing Strong: China's Security Challenge to Asian Security.” *Survival*, 36(12).
- Harding, Harry. 1990. “Prospects for Cooperative Security Arrang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Journal of Northeast Asia*, 12(1).
- Moore, T. G., & Dixia, Yang. 1999. “China, APEC and Economic Regionalism in the Asia-Pacific.”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13(2).
- Godwin, Paul H. B. 1994. “Force and Diplomacy: Chinese Security Policy in Post Cold War Era.” Samuel S. Kim, ed. *Chinese and Worl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Westview Press.
- Manning, Robert. 1994. “Burdens of the Past, Dilemmas of the Future: Sino-Japanese Relations in the Emerging International System.” *The Washington Quarterly*, 17(1).
- Foot, Rosemary. 1996. “Thinking Globally From a Regional Perspective: Chinese, Indonesia and Malaysian Reflections on the

- Post-Cold War Er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8(1).
- Kim, Shee Poon. 1998. "The South China Sea in China's Strategic Thinking."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9(4).
- Nyun, Yu Ha. 1994. "Human Rights in China." *Beijing Review*. December 12~18.